



[산업] 글로벌 위상 드높인 삼성 가전 혁신 06

metro

Life

[이뉴스]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 "유튜브 BGM, AI가 똑똑" L4



한국영화의 중심 '충무로'에 비상업 영화 전용관 문 연다

지하3층~지상10층 4800㎡ 규모 독립·예술영화 기획·감상 한 곳에

국제지명 설계 공모 당선작 박스 쌓인 형상에 개방적 공간

프랑스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미국 뉴욕의 '필름 포럼'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영상문화공간이 충무로에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독립·예술·고전 영화 등 비상업영화 전용관을 보유한 '서울시네마테크' (가칭)를 짓는다고 5일 밝혔다. 사업비로 26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네마테크는 영상감상뿐만 아니라 영화 기획·제작·보존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는 영상전문공간이다.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4800㎡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공간에는 독립·예술·고전 영화 상영관 각 1개와 영화 도서관 및 보관실인 '영화 아카이브',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카페, 서점,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선다.

한국영화계의 숙원인 서울시네마테크는 2013년 서울시 영상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그러나 부지와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 일정이 연기됐다. 중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업



서울시네마테크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부지선정 이후 투자심사, 국제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착공식은 개최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서울시네마테크는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인 'Montage 4:5' (매스스터디 건축사사무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건축물을 설계한 조민석 씨는 2014년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최고상)을 받은 건축가다.

당선작 Montage 4:5는 상영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출콘크리트 박스 4개가 겹겹이 쌓인 형상을 가진

다. 상영관 사이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개방적인 공간들로 노출콘크리트 매스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건물 내부 전시설계와 시설 운영 방식 등 전 과정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와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이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풍부한 영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서울시 대표 영상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802곳 집중점검

서울시·SH공사, 감염 확산 차단 외국식료품 업소 81곳·음식점 721곳

서울시와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전통시장 일대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의 외국 식료품 업소 81곳과 주변 음식점 721곳을 점검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의 점검반이 5명씩 15개 팀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불법 야생동물 취급, 조리실 위생 상태, 무신고·무등록 영업, 사용 원료, 식품 보관 상태, 유통기한 준수 등을 살펴본다.

특히 박쥐,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쥐는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번 신종코로나 발원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봉사단원이 전통시장 특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 '세실극장 옥상' 시민 쉼터로 개방

8월 준공... 덕수궁 조망·휴게공간

서울시는 정동 세실극장 옥상을 시민 쉼터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와 협력해 1970~1980년대 소극장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 연극 1번지로 불렸던 정동 세실극장을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든다. 다음 달 착공해 8월 공사를 마치고 개관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6일 정동 세실극장 옥상에 전담대형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세실극장 옥

상에 총 566㎡ 규모의 휴게 공간을 만들고 벤치·그늘막·녹지 공간 등을 배치한다. 지상에서 옥상을 잇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옥상과 엘리베이터는 향후 10년간 시민에게 개방한다.

세실극장 옥상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덕수궁, 왼쪽으로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간직한 서울성공회 성당이 시야에 들어온다. 정면에는 세종대로, 서울시청,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자리해 있다.

시는 옥상 개방 시간을 근처에 있는 덕수궁 개방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야간개장 등 덕수궁 행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공원 일몰제로 실효위기 놓인 한남근린공원

정의당 "서울시, 부지 매입 직접 추진해야"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특별재정 편성해 녹지 확보해야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킴이 시민모임은 5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직접 추진하라"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 자치구가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시점이 최대 7년 연기된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남근린공원 서울시 직접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의당과 환경·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문제"고 꼬집었다.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은 "한남근린공원이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만8197㎡ 중 99%가 사유지인 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원

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예산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구 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대 청 지원 방침에 따라 용산구가 공원 매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에 토지보상비로 전액 지원하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예산 공방을 벌이는 동안 한남근린공원의 토지 매입 비용은 2014년 1200억원에서 올해 3400억원으로 2200억원 올랐다.

이동영 위원장은 "실효 위기에 놓인 공원에 대해 일반회계를 투입, 특별재정을 편성해 녹지확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공공녹지확충부담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혹 밝힌다

중증환자 진료거부 등 의료법 위반 조사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방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